

광남일보





강진 인구정책, 정부 인정 받았다 육아수당 등 운영 성과 ··대통령 표창 수상

조간 제7884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고흥, 도시재생 연계 수제맥주 개발 청년 창업·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GwangNam.co.kr

광주FC 아사니, 팀 K리그 팬 일레븐 선발



농협 전남본부, 도교육청과 농업체험 교육 11월까지 9개 학교 참여 쌀 요리교실 등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음력6월22일)

전남 첫 국립의대 설립 기대감 커진다

정은경 복지부장관 후보자 "전문 인력 양성체계 필요"

국민 80% "공공의대 찬성" 범사회적 지지에 추진 탄력

공공의료 강화를 국정 기조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지역 공약인 '전남 국립의대 설립' 논의가 다시 본궤도에 오 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 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 성에 공감을 표시한 데 이어, 최근 여론조 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8명이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 책 추진의 명분이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지역・필수 •공공의료 분야의 만성적인 전문인력 부 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가능한 공공분 야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필요하다"며 "국 민, 학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화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을 논의하겠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의 발언은 구체적 실행 계획 했다 을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복지부 장관 내 정자로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의 방향성과 있다. 필요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인식을 다시 확인한 공식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1~2일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전남 등 지역을 중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 과제로 꼽혀왔다. 심으로 한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다시 정 사 결과,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한다는 책 의제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뒤따 응답은 83.1%에 달했다. 반대는 12.9%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다. 고령화율은 이자 국민 생명권 보장을 위한 과제"라고 르고 있다.

정 후보자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해 비율이 고르게 높아, 의료 사각지대 해소 분만·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삼계탕 드시고 힘내세요" 초복을 앞두고 15일 오전 광주 북구 임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광주봉사관 적십자 무료급식소에서 광주 서구 농성2동 적십자 봉사회 고윤순 회장과 가족들이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하고 있다. 이날 고윤순 농성2동 적십자 봉사회 회장은 320인분의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서도 "공공의료 강화라는 정책 방향에는 외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제도 시행 에 있어서는 의료계, 국민, 전문가 등과의

이 같은 기조는 국민 여론과도 맞닿아

에 그쳤다. 연령과 지역을 막론하고 찬성

가 폭넓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의대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대표 공약 가운데 제도적 조율을 통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 하나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전남・전북・인 천 등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국립 의과대학을 신설해, 필수의료 인력을 지 역 중심으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교육모델, 정주 여건 개선 등 실행 가능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여론조 바 있다. 그중에서도 전남 의대는 공약의 상징성과 정책적 절실성이 가장 큰 지역 건의해왔다. 김영록 전남지시는 "전남 의

24%를 넘어 전국 최고 수준이며, 응급•

이 고착화돼 있다. 도서・산간 지역이 많 은 지리적 특성 탓에 환자의 의료 접근성 이 현저히 낮아, 의료 공백이 곧바로 생 명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이에 전남도는 수년 전부터 전남형 지 역의사제 도입 방안, 공공병원과의 연계 정책 로드맵을 마련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대는 단순한 지역 숙원이 아닌, 국가가 책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임져야 할 공공의료 체계 재편의 출발점 강조해 왔다. ▶2면에 계속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시작전권 새정부 임기 중 전환 목표"

안규백 장관 후보자 밝혀…대통령실 "개인 의견"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15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 련해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관련기사 4면

안규백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열린 국 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 권 전환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느냐' 라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다. "이재명 정부 임기 이내에 전환을 목 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

전작권 전환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군사비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에 따 라 차이가 있지만 21조원 정도로 판단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질의에서도 "지난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 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 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고, 박 근혜 정부 때는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 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자의 발언은 전작 권 전환 조건을 충 족하기 위한 한국 군의 노력이 진전 을 이뤄가고 있다 는 의미로 해석된

'상당한 성과를

그러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장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 며 "'5년 안'과 같은 시한을 정했다는 것은 전혀 대통령실 내에서 (검토되 고) 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안 후보자 포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함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를 열고 후보자 검증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이날 더불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어민주당은 새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등을 강점으로 꼽으 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며 후보자들을 엄호했고,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의 위법 논란을 비롯한 도덕 성 문제를 정조준하며 의혹을 집중 거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때늦은 장마'…19일까지 최대 80mm 비

전남 북부 서해안 시간당 30mm

광주·전남지역에 오는 19일까지 최대 80mm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15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제29 차 날씨 프리줌 (Pre Zoom) '에 따르면 북 쪽 기압골이 남하하면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16일부터 비가 오겠다.

특히 17일에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 리를 타고 수증기가 유입, 전남 북부 서해 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10~60mm이 다. 전남 북부 서해안은 80㎜ 이상을 기록 하겠다.

이후 비는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18일부터 확장하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 쪽의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뿌려질 것으로

기상청 관계자는 "17~19일 많은 비가 내리겠다"며 "야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침수 위험 지역에 대 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당정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완화"

감면 한도 월 최대 2만원 확대

철 전기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7·8월 폭염으 원은 1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 관계자와 당정 협의를 한 뒤 국회 브리핑 해 누진 구간 완화키로 해 국민들의 여름 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 획"이라며 "지난 7월 1일부터 취약계층 에 70만1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한다"고 말했다.

원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한국전력에서 시행 중

김 의원은 "당은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 인 여름철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 화 제도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요금 1단계 적용 구간은 기존 200kWh 이하에서 300kWh 이 하로 완화했다. 2단계 구간은 기존 201~ 400kWh에서 301~450kWh로, 3단계 구간 또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 은 기존 401kWh 이상에서 451kWh 이상으 로 완화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